

월요광장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캐릭터 비즈니스와 관련해 최근 두 건의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있었다. 하나는 맥도날드사가 인기 게임 캐릭터 ‘슈퍼마리오’ 피규어를 고객 사은품으로 주는 행사장이 미어 터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 해 12월 제주도에 개장한 ‘헬로키티 아일랜드’를 6개월 만에 15만 명이 다녀갔다는 뉴스였다. 광고롭게 두 건의 뉴스에 등장한 캐릭터가 모두 일본산이다. 예전에 이런 뉴스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지켜볼 수 있다. 우리 캐릭터 산업의 경쟁력 역시 커졌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미키 마

지역 캐릭터에 눈을 돌리자

우스’, ‘헬로키티’ 등 외산 캐릭터 중심이던 4조원 규모였던 한국의 캐릭터 시장은 매년 10% 이상 성장했다. 지난해에는 매출 8조원, 수출 4억 4000만 달러로 10년만에 2배 이상 커졌다. 특히 ‘뿌까’ ‘뽀로로’ ‘로보카폴리’ ‘라바’ 등 많은 국산 캐릭터들이 세계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차세대 한류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다. 질적 측면에서도 국내 캐릭터 산업의 발전은 주목할 만하다. 캐릭터 라이선스의 관리가 체계화되었고 K-Pop, 게임, 방송, 테마파크 등 다양한 콘텐츠와 융·복합하면서 비즈니스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 캐릭터 산업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걸쳐, 양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빈약한 투자와 열세한 창작 여건을 아이다와 열정으로 이겨낸 업계의 노력 덕분이다. 특히 좁은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처음부터 해외로 눈을 돌린 창의적 도전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도 지역 캐릭터 분야가 그렇다. ‘캐릭

터 왕국’이라 불리는 일본은 지역 캐릭터들만 모아 펼치는 그랑프리 행사가 매년 열린다. 2012년 행사에는 무려 865개의 캐릭터가 등록했다고 한다. 그 가운데 구마모토회의 ‘쿠마몽’캐릭터는 관련 상품 매출이 2012년에만 296억 6200만 엔, 한화로 3000억 원이나 된다. 잘 만든 캐릭터 하나가 지역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들도 거의 예외 없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디자인에만 치중한 캐릭터로, 홈페이지나 각종 홍보물에 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역 전통소재 캐릭터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지역별 투자와 열세한 창작 여건을 아이다와 열정으로 이겨낸 업계의 노력 덕분이다. 특히 좁은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처음부터 해외로 눈을 돌린 창의적 도전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도 지역 캐릭터 분야가 그렇다. ‘캐릭

필수 조건이다. 단순히 예쁘고, 눈길이가 디자인만으로는 캐릭터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다행히 오랜 역사와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각 지역에는 캐릭터로 발굴할 수 있는 풍부한 스토리텔링 소재가 넘쳐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사와 공들여 만든 캐릭터가 결합해 창출되는 시너지 효과는 지역의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서울캐릭터·라이선싱 페어 2014’행사가 열렸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이 행사에 국내외 270여 개 캐릭터, 라이선스 관련 기업이 참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에도 일부 지자체와 지역진흥원의 캐릭터가 참여했지만, 내년에는 지역 캐릭터 개발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둬 더 많은 지역 캐릭터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머지않아 지역의 경제지도를 확 바꿀 발군의 지역 캐릭터 성공사례가 만들어질 거 기대한다.

법조칼럼



김현웅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

‘흥어’나 ‘과매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모두 특정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의미로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언제부터 다른 지역 사람들을 ‘흥어’나 ‘과매기’라고 부르며 적대적 감정을 가지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지역감정은 정치적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삼국시대 국가 간 영토 확장 또는 통합과정에서 비롯된 경쟁

지역감정에 대한 생각

과 대립에서부터 유래되어 통일신라 이후 더욱 심화 되었고, 그 후 고려 태조 왕건의 호남 지역민 등용제한과 조선시대 선조 22년 전주에서 일어난 정여립의 난 등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지역감정의 유래를 살펴보면,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소외로 발생한 경제적 격차는 영·호남간의 적대감정과 지역편견을 더욱 심화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기 이전인 1960년의 일인당 소득은 경상도가 8395원인 반면 전라도는 7518원으로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 9482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되고 성장기에 접어들 1970년에는 경상도 지역이 8만4634원인 데 비해 전라도는 약 2만 5000원이 떨어진 5만8919원에 불과하여,

경상도 지역 경제개발이 전라도 지역보다 우선되고 집중되었으며,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가 엄연히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1971년 제 7대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각종 선거 때마다 이러한 지역감정의 문제가 표출되었습니다. 7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 결과를 보면 박정희 후보는 영남에서 72%, 호남에서 36%의 지지율을 얻은 반면, 김대중 후보는 영남에서 28%, 호남에서 64%의 지지율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지지성향이 갈리는 경향은 그 전의 선거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감정은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회문제이지만, 우리는 이제껏 이를 도의적 차원에서 ‘그러면 안 된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 상에서 난무하는 악성 댓글들을 보면, 이제는 지역감정의 문제가 단순히 ‘도의적

차원’이 아니라 ‘법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영국에서는 1965년 인종차별법이 제정된 이래로, 인종차별적 발언 자체를 범죄행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국에서 ‘인종차별’의 문제가 국민의 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역감정의 문제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은 이윤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겨서,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규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효용의 감소를 야기한다고 가르치지만, 지역감정적 발언은 규제한다고 해서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규제와 함께, 지역감정에 대해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춘다면 오늘날보다 나은 내일이 될 것이라 생각해보입니다.

社說

잇단 추락사고, 광주 군공항 이전 시급하다

지난해 T-50 고등훈련기의 광주 상무지구 인근 추락에 이어 소방헬기까지 광주 도심 한복판에 추락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공항이 인구 밀집지역인 도심에 위치해 있어 자칫 항공기 추락 등으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광주공항 소음피해 광산구주민대책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이 어 발생한 추락사고는 대형참사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며 “도심 아파트 위를 비행하는 조종사와 주민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라도 군공항을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 광주 군공항은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고등훈련기가 하루 최대 수백 회씩 이·착륙하면서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는 물론 불안과 공포를 야기해 왔다. 특히 군공항과는 불과 1~2km 떨어진 곳에 수십만 가구와 주요 관공서, 공단 등이 밀집한 하남·상무지구가 있

으며, 비행 경로에는 대형 아파트 단지인 수안·침단지구가 자리해 주민들은 항상 사고 위험 속에 생활해 왔다. 지난 17일 광산구 장덕동 수안지구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사고 지점도 인근에 중·고등학교와 상가, 아파트 단지가 있어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인 이 헬기는 광주 군공항에서 이륙한 뒤 사고를 당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공군의 초음속 훈련기가 추락한 곳도 상무지구와 인접한 데다 민가에서 불과 600m 떨어진 지점에서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제 군공항 이전은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공군 측은 먼저 도심을 통과하는 비행 경로부터 수정해 참사를 막아야 한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공항 이전을 위한 각종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하며, 정부도 이에 적극 화답해야 한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더 이상 끌 수는 없는 일이다.

최대 관세율 적용으로 쌀 농업 피해 줄여야

20년을 버텨 온 쌀 시장이 개방된다. 정부는 세계 무역질서를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쌀 수입문을 열기로 하고 높은 관세로 쌀 농가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며 대신 “높은 관세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수입물량이 과도해지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농민들의 반발은 거세다. 우리 사회에서 상징성이 큰 쌀 시장개방에 농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대로 별리적인 면 등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쌀 관세 예외를 인정받아 올해 말까지 20년간 두 차례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유예가 연장되면 의무수입 물량이 올해 40만

9000t에서 최소 82만t으로 늘게 된다. 재정부담도 국내 소비 위축과 겹친 쌀 과잉을 염려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국가 식량안보 의지를 확고히 하는 한편 쌀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전남도 역시 국익을 위한 불가피성을 감안하더라도 선(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도는 또 농민들의 불안 해소와 지속가능한 쌀산업 육성을 위해 5년 주기의 곡물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한 바 있다. 쌀 관세화 유예는 올 연말 종료되며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관세화 여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상대국의 관세 인하 요구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되며 500% 이상 최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을 촉구한다.

기고



이명균 세무사

최근 본격 시행에 들어간 기초연금금 65세 이상 노인분들께 최대 20만원을 지급하지만, 소득과 보유재산 등을 감안해 일정액을 감액하여 최소 2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보유재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액이 대도시는 1억800만원이지만 농어촌이 속한 군 단위는 5800만원으로 책정. 농어촌이 대도시보다 불리하게 되어 있다. 이 차이는 대도시의 주거비가 농어촌보다 더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농어촌도 고려해야 하는 열악한 분야들이 많다. 즉 대중교통의 경우

농어촌·비수도권 역차별 유감

대도시 지하철은 경로무료이고, 농어촌의 마을버스는 경로 없이 유료이다. 또 대도시 좋은 노인 복지시설들을 무료 또는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농어촌은 동네 마을회관이 고작이다. 병원 이용도 대도시는 질함에 따라 전문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나 농어촌은 버스를 타고 가서 읍내 의원에서 진료받는다. 이러한 농어촌의 열악한 부분들은 그냥 두고서, 대도시 주거비만을 챙겨주는 기초연금 산정방법은 농어촌에 사는 분들로서는 유감이다. 이번엔 기초연금을 받는 농어촌 65세 이상 분들의 대부분은 그동안의 국가 경제 성장의 몫을 나누어 가지지 못한 분들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에서까지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다음으로, 농어촌에 소재하는 주택은 대개 개별주택공사가격도 몇백만원에 불과하다. 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한 경우의 예를 들어보겠다. 농어촌에 부모가 살고 있거나, 과거에 사놓았던 주택을 도시에 나가 사는 자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시의 주택과 똑같이 주택 한 채가 된다. 그래서 주택공사가 분양 또는 임대하는 아파트를 청약하려 하면 주택보유자이기에 청약자격이 없어 내집마련이 어렵다.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이 농어촌의 주택을 부모 생전에 물려받아 보유하고 있으면서, 도시에 살고 있는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지 못한다. 어느 경우는 농어촌 집값 몇 곱절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와 같이 농어촌의 부모주택을 물려받는 것이 없는 것만도 못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재정경제부 양도소득세법령은, 고향인 농어촌에서 뿌리를 두고서 도시에 나가 살고 있는 자식들에게 유감이다. 그렇다고 해서 버젓이 있는 고향주택을 헐어 버릴 수도 없는 만큼 이러한 법령과 제도는 고쳐져야 한다. 다음으로, 비수도권에 불리한 국제행정의 문제다. 국제청의 상속세 조사관리의 경우 일정한 기준금액을 마련해두고, 기준 이상이면 관할이 지방국세청장이

며 이하의 세무서장이 관할을 하게 되어 있다. 기존 금액은 전국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서울청과 경기도를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은 50억원, 나머지 4개 지방국세청은 30억원이다. 이 같이 금액이 다른 이유는 수도권청은 고액상속자가 많고 비수도권청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업무량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때 지방국세청의 조사와 세무서의 조사는 조사 인원수, 조사기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사받는 상속인들로서는 부담이 다르다. 이 같은 상속세 조사의 차별은 비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자식들에게 부담을 더 주게 되는 것이기에 유감이다. 이 같이 국제청의 기구에 업무량을 맞추느라 비수도권에 불리한 차별을 주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농어촌이나 비수도권에 대한 상대적 차별은 위 세 가지뿐만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 적지 않게 존재한다. 박근혜 정부에서라도 이러한 역차별들을 개혁과제로 삼아 시정해 주었으면 한다.

장마철 산행은 안전수칙 준수가 최우선

계절은 바야흐로 한여름을 치닫고 있다. 하지만 무덥다고 집에만 가만히 있기보다는 맑을 흘러더라도 밖에 나가 몸을 움직여 보는 것이 건강을 위해 훨씬 낫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주말이면形形色색의 등산복을 차려입고 산행을 하는 수많은 사람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웰빙바람을 타고 산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다.

우리고장에도 월출산국립공원이 자리하고 있어 주말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산은 우리에게 허락한 조물주의 위대한 선물이다. 오랜만에 가족이나 친한 사람과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해보면 일주일에 쌓인 스트레스도 풀릴 뿐만 아니라 생활의 활력을 찾아 더욱 활기차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안전수칙 준수가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의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월출산에서 빗길에 사진을 찍다 미끄러지면서 낙마한 경우나 친구와 함께 산행중 바위굴로 떨어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고장에서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우리는 사고가 나면 늘 안전불감증을 개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 그런데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장마철에 접어들어 요즘 산에는 언

제나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안전불감증으로 사고를 부르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 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되새기자. “쉬운 인생이 없듯 쉬운 산행은 어디에도 없는 법이다.” ▲김도연 영암군 영암읍 농부주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無 等 鼓

러시아 출신 미국 항공제작자 이고르 시코르스키(1889~1972)는 ‘헬리콥터(helicopter)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다. 라이트 형제가 첫 비행을 한 지 36년 후인 1939년 다른 방식으로 하늘을 나는 실용적인 비행체를 만들었다. 회전하는 날개(rotor)에서 양력을 얻어 비행하는 헬리콥터의 아이디어는 ‘르네상스 맨’으로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케치에서 볼 수 있듯 4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강력한 추진력을 내는 동력장치(엔진)가 뒷받침되지 않아 상상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헬리콥터라는 명칭은 그리스어 ‘헬리코’(helico=나선형·회전)와 ‘프테론’(pteron=날개)에서 유래했다. 활주로가 필수적인 고정익 비행기와 달리 헬리콥터는 수직 이·착륙은 물론 전·후진, 좌·우 비행과 공중정지를 할 수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헬리콥터는 개발 이후 ‘양날의 칼’ 같은 쓰임새를 보였다. 초창기 한국전쟁 때에는 부상자를 후송하는 용도로 활용됐지만 베트남 삼야 시정해 주었으면 한다.

헬리콥터

지난 17일 광주 광산구 장덕동의 한 아파트 옆 인도에 강원 소방본부 소속의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순직한 소방공무원 5명은 ‘세월호’ 사고 해역의 항공수색을 지원한 후 돌아가던 길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세월호 헬리콥터 시대를 연 시코르스키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다. “생명을 구하는 헬기의 역할은 인간 비행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페이지 중 하나를 차지한다.” 그동안 많은 사고현장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온 다섯 ‘수호천사’의 명복을 빈다. /송기화 사회2부장 song@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대외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73	문화생활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 치 부 2200-642	여론대체부 2200-696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